

## 經濟學原論 用語의 改善을 위한 論議 \*

白 薰 \*\*

### 논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타난 용어의 문제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그 네 가지 유형으로는 첫째,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셋째,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편중된 용어의 사용 등이다. 이와 같은 용어의 문제점은 경제학 학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경제학이 현실 경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문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용어들을 더욱 적절하고,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경제학용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경제학 용어, 경제학원론, 영미 경제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2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심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 I. 서론

한국에 서구식 경제학이 소개된 역사가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전공자들의 경제학 용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 40여년간 경제학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경제학 용어의 문제점과 그 개선의 필요성을 다룬 논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경제학 용어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을 다룬 많지 않은 논문 중의 하나가 손정식(1979)의 소고(小考)<sup>1)</sup>이다.

이 소고에서 저자는 경제학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지적하였다. 그 첫째는 영어로 표현된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 표현이 갖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잘못 번역한데 따른 문제점이다. 아비트리지(arbitrage)를 재정(裁定)으로, 그리고 무상재(free goods)를 자유재(自由財)로 번역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 예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동서양간의 언어관습의 차이를 무시하고 서양식 어법에 맞추어 번역한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선물거래(先物去來)라는 표현이 우리말의 의미상 ‘물건을 먼저 인도하는 거래’라고 받아들여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나중에 인도되는 거래’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forward exchange’를 선물거래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러한 유형의 예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우리말에 없는 한자어(漢字語;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로 번역하거나 또는 일본식 영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국적(國籍)없는 경제용어를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영어 표현의 ‘gross’를 ‘조(粗)’로 번역하는 경우나, 또는 ‘concession’을 ‘양허(讓許)’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지적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제학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사용이 경제학을 어려운 학습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학문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학 용어가 갖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아울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이 갖는 의의는 경제학 용어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학이 사회적 변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새

1) 손정식, “오역(誤譯)된 경제용어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제학회지』, Vol. 27, 1979, pp. 88~99.

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게 변화해 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원론의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용어가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문제는 서구 경제학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맞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 유형은 용어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또는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따른 문제이다. 세 번째 경우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부기관 또는 경제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우리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경제학원론 교과서가 영·미 경제 현실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경제학원론의 용어가 갖는 문제점

### 1.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경제학은 현실과 밀접한 학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경제학에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개념들을 쉽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목적에서 경제학원론은 가급적 쉽게 쓰여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경제학 또는 경제 교양서들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경제학원론에는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용어들이 많다. 이것은 서구의 경제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제학 용어들이 적절하게 옮겨지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용어들 중의 하나가 ‘한계(限界)’라는 표현이다. ‘한계’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제학원론에서 ‘한계효용’을 시작으로, ‘한계대체율’, ‘한계비용’, ‘한계수입’, ‘한계요소비용’, ‘한계요소수입’, ‘한계변환율’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한계’라는 표현이 한국의 경제학원론에 들어오게 된 연

유(緣由)는 일본의 경제학 교재로부터이다. 서구식 경제학의 도입 초창기에 한국의 경제학 용어들은 일본의 경제학용어를 가져온 것들이 많다. 그 결과 일본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많은 표현들이 그대로 한국의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었고, 그 유산(遺産)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한계'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 marginal 을 잘못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2)</sup> 영어 표현 marginal은 edge(끝)와 additional(추가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sup>3)</sup> 우리가 흔히 타이핑할 때, '마진(margin)을 맞춘다'라는 표현에서는 첫 번째 의미인 edge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경제학 용어로서 marginal cost에서는 additional의 의미가 추가된다. 따라서 marginal cost는 additional cost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한계'라는 표현은 '끝(edge)' 또는 '한도(限度)'라는 의미는 갖지만, '추가적(additional)'이라는 의미는 없다.<sup>4)</sup> 따라서 이 표현들이 경제학을 처음으로 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다.

'한계'라는 표현이 갖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한계'는 '추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계비용'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한계비용'은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총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된다.<sup>5)</sup> 그러므로 '한계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추가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한계비용을 추가비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 
- 2) '한계'라는 표현이 일본 교과서에서 사용된 예는 高文社, 『經濟原論』, 岸本誠二郎 監修, 東京: 高文社, 昭和 33년, p.17; Thurow, Lester C., Heibroner, Robert L., and Galbraith, James K., *The Economic Problem*, 中村達也 譯, 『現代經濟學』(上), 東京: テイビーエス・ブリタニカ, 1990, pp. 258~259 등을 참조하시오.
  - 3) Random House의 동의어 사전(Thesaurus) (1984)에는 margi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margin n. 1. The student wrote notes in the margins of the book: border, boundary, edge, side, rim, verge, confine, bound, hem, fringe, skirt. 2. There is no margin for error in his plan: leeway, safeguard, extra amount, added quantity, extra room, allowance.
  - 4) 『국어대사전』(교육서관(1994))에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계 (명) ① 땅의 경계, boundary ② 사물의 정해 놓은 범위, 제한(制限).
  - 5)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 경제학원론』, 제 4 전정판, 박영사, 1999, p. 271.

‘추가비용’이라는 표현이 여러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마지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즉, 50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비용이 될 수 있고, 마지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결정과 관련된 표현으로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X재의 한계비용(추가비용)이 X재의 한계수입(추가수입)보다 작으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윤을 늘어나게 한다.” (이윤극대화 원리)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 대신에 추가비용과 추가수입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추가비용과 추가수입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전체 양보다는 추가적인 양을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윤극대화 원리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의 비교는 같은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단위이든 100단위이든 아니면 1단위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는 ‘추가수입’이나 ‘추가비용’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한계비용’보다 ‘추가비용’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만이라도 ‘한계’라는 표현의 사용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계효용’은 ‘추가효용’으로, ‘한계요소비용’은 ‘추가요소비용’으로, 그리고 ‘한계요소수입’은 ‘추가요소수입’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한계’ 용어들은 ‘추가’로 바꿀 수 있다. ‘한계’라는 표현을 ‘추가적’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다면, 경제학원론의 많은 개념들이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대체율(限界代替率)’을 생각해 보자(우선 이 표현 자체는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변환율’과 함께 마치 공학적(工學的)인 용어인 것 저럼 느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대체율’은 ‘X재 한 단위에 대한 Y재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한계’를 ‘추가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무차별곡선’의 (-)기울

기는 '추가적인 X재 한 단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Y재의 양'으로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학 용어들은 많이 있다. 경제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인 '무차별곡선(無差別曲線)'도 그러하다. '무차별곡선'은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용어 자체는 우리말에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A바구니와 B바구니에 대해서 무차별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말에서 '무차별'이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해서는 쓰일 수 있는 지 몰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이유에서 '무차별곡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재고(再考)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등효용곡선(等效用曲線)' 또는 '동일만족곡선' 등이 그 후보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표현들보다 더 나은 표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우리는 경제학 용어 중에서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게 받아들여온 표현들을 전공자의 시각보다는 학습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 2.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경제학 용어가 갖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점은 그 용어의 정의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그 중 하나의 예가 '균형(均衡)'이라는 용어이다. 경제학원론에서 균형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과 무엇이 같아져서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균형은 영어 표현의 balance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되는 것이 '국제수지의 균형'이다.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국제수지표 상에 '수입(受入, credit)'과 '지급(支給, debit)'이 같다는 뜻이다. 국제수지표를 영어로 the balance of payments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 때의 균형은 양쪽에 같은 무게를 놓도록 되어있는 천칭(天秤)과 연상(聯想)될 수 있다.

6) 앞의 『국어대사전』에는 '차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차별(差別) (명) (하:타) 등급이 지게 나누어 가름.

한편, 경제학에서 균형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誘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sup>7)</sup>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되는 것이 ‘균형 시장가격’이다. 균형 시장가격의 영어 표현도 a balanced price가 아니라 an equilibrium price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시장가격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균형가격의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이다. 이 때의 균형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균형(an equilibrium)의 개념이며, 진자(振子, a pendulum)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와 연상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의 균형은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변수가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때, 그 변수의 변화 방향을 말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영어에서는 균형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개념들이 a balance와 an equilibrium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 두 영어 표현들을 모두 ‘균형’으로 번역한 우리의 경우 각기 어떠한 개념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경제학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갈아졌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균형은 단순히 양쪽이 같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예로,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이 같은지 여부를 의미하는 균형재정 또는 불균형재정). 경제성장의 유형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균형성장’ 또는 ‘불균형성장’의 경우에서도 균형의 의미는 “갈아졌다”에 해당된다. 이 경우 균형은 두 개 이상의 부문이 어느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산업간 성장이 조화를 이룬다든지, 또는 계층간 소득구조가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균형성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산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나, 계층간 소득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불균형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때의 균형은 서로 다른 부문간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균형성장이 의미하는 영어 표현도 equilibrium growth가 아니라 balanced growth이다. ‘소득균형’ 또는 ‘소득불균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유효수요에 의해서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균형 국민소득’은 이와는 다른 의미의 균형이다. 이 경우, ‘균형’은 “움직이지 않는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생산활동 수준이 유효수요의 수준과 같으면, 재고의 변동이 발생하지

7)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원론』, 제4전정판, 박영사, 1999, p. 73.

않으며, 결과적으로 생산활동 수준은 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균형 국민소득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활동 수준이 불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은 영어 표현의 an equilibrium level of income이라고 하지, a balanced level of income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균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다. balance를 의미하는 '균형'의 경우와는 달리, equilibrium은 재고(在庫)의 변동에 의해 균형이 아닌 경우 균형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동적 기구(機構)를 갖는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균형의 두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원론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제학원론에서는 균형국민소득을 단순히 '총생산을 나타내는 45° 선과 총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소득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균형국민소득의 결정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언제나 균형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이 두 가지 균형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용어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들은 많다. '화폐(貨幣)'와 '통화(通貨)'라는 용어의 사용도 이러한 문제점을 갖는다. 경제학원론에서 '화폐'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으로 정의되고,<sup>8)</sup> '통화'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화폐의 유통량'으로 정의된다.<sup>9)</sup> 이 두 용어와 관련된 표현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예로, 통화(M1)의 본원통화에 대한 비율은 '통화승수(通貨乘數)'로 부르고, 반면에 통화량의 증가가 소득수준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개념의 경우 '화폐승수(貨幣乘數)'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경우 반드시 어느 표현이 다른 표현보다 더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화폐와 통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통화제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key currency의 경우도 관습적으로 '기축통화(基軸通貨)'로 부르지만, 이보다 '기축화폐'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축화폐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간 거래에서 중심으로 사용되는

8) 안국신, 『신경제학개론』, 제3판, 을곡출판사, 1996, p. 417.

9) 같은 책, p. 420.



화폐와 관련된 문제이며, 반드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의 '국제 통화량(international money suppl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어의 currency는 우리말 화폐에 해당되고, money는 통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개념의 정의 자체는 분명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조세(租稅)의 유형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증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이다. '증가세(ad valorem tax)'는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고, 종량세(specific tax)는 팔리는 상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0)</sup> 이 두 표현이 일본어(日本語)에서 온 표현인 것을 굳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sup>11)</sup>, 증가세는 '정률세(定率稅)'로, 그리고 종량세는 '정액세(定額稅)'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면, 결국 정률세가 되고, 상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면, 결국 정액세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의 종류를 설명할 때에도 증가세와 종량세라는 표현보다는 정률세와 정액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3. 잘못된 표현의 사용

경제학원론의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용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경제 용어들이 경제학 교과서의 표현들과 다르다면 경제학은 현실 사회와 괴리된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개정된 한국은행의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이다.

한국은행은 1998년 1월에 공표한 국제수지표 편제 기준에서 IMF의 권고에 따라 1993년 9월에 IMF에 의해서 제정된 『국제수지 편제기준, 제5판』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된 신기준에서는 각 계정의 명칭과 구성요

10) 같은 책, p. 223.

11) 이러한 표현은 日本大辭典刊行會 刊,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第4圈, 昭和 五十六年, p. 928, p. 990에서 확인될 수 있다.

소들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의 경우, 이전의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에서 상품·서비스수지(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세분),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수출입상품을 상품 특성별로 세분화하고,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부, 기타서비스 및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세분하며, 특히 무역외수지에 분류되던 투자수익수지, 임금 등을 소득수지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수지표가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자유화 진전에 따른 대외거래와 국제유동성 변화 등을 보다 상세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새로운 국제수지표 상의 용어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김대식(1999)은 한국은행의 새 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의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상품수지'라는 표현은 '재화수지'로 고쳐져야 한다.<sup>12)</sup> 이러한 지적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사고파는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부른다'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한국은행의 용어는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따르면 서비스는 상품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실무자들이 용어 사용의 오류를 범하였다는 말이 된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지적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착오는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현상은 경제학 교과서들이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좇아간다는 현실이다.

한편,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은행의 용어와 무역수지라는 이전의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등의 용어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품수지'나 '상품·서비스수지'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무역수지'라는 표현은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국가 통계에서 무역수지를 가리키는 trade balance(또는 merchandise balance)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용어인 '상품·서비스수지'라는 표현은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순수출(純輸出)'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경제학원론

12) 김대식 외, 앞의 책, p 875.

에서 '순수출'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差)'로 정의된다.<sup>13)</sup> 그러므로 순수출은 상품·서비스수지와 마찬가지로의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수지표 상에서 '상품수지'라는 표현은 '재화수지' 또는 '무역수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재화수지'라는 표현이 생소하다면, 종전대로 '무역수지'라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상품·서비스수지'라는 나열식 표현보다는 '순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대중매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표현이 현실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물론 경제학의 모든 이론적 용어들이 현실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실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경제학이 현실적인 학문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의 경제 용어 중에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과 맞지 않는 것은 맞는 표현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영·미 경제 현실에 편중된 경우

경제학 용어가 갖는 문제점의 또 다른 유형은 지나치게 영·미 경제 현실에 편중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앞에서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문제점 보다 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이 한국의 경제학을 현실과 괴리된 학문이 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通貨政策, monetary policy)'과 '금융정책(金融政策, financial policy)'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영어 표현 monetary policy가 '금융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든지, '무역정책(貿易政策)'과 '통상정책(通商政策)'의 개념 차이가 모호한 것 등도 모두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영·미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laissez-faire)에 입각한 경제사상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제 이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편중되어 서구의 경제학이 도입되면서 경제학 용어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

13) 김대식 외, 앞의 책, p. 548.

우가 있다. 따라서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용어들에 한정되어 정의된 우리 경제학 원론의 표현들은 한국적 경제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절에서 별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한국에 서구의 경제학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용어들이 영미 경제정책을 반영하는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 III. 영·미 경제학 교과서 편중에 따른 문제점

#### 1. 한국 '현대경제학'의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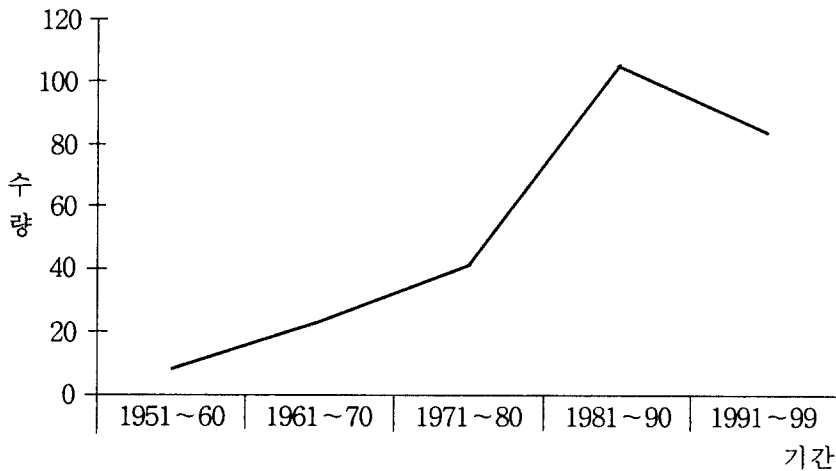
해방 이후 우리나라 현대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현대경제학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독일과 일본의 경제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이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들이 변화되어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총 260 여종의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40여년간 기간별로 발간된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우선,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경제학원론의 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났다. 이 때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영·미 경제학 교과서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때이다.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경제학원론의 내용도 커다란 변화를 나타낸다. 1970년대 후반 이전에는 경제학원론의 내용이 독일과 일본의 경제학 문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sup>15)</sup>, 그 후에는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14) <표 1>에 나타난 숫자는 1999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제목에 '경제원론' 또는 '경제학원론'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단행본 저서들의 숫자이다.

15)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로는, 홍우, 『경제원론』, 探求堂, 1954; 최호진, 『경제원론』, 보문각, 1958; 성기춘, 『경제원론』, 박영사, 1965; 백영훈, 『현대 경제학』, 문운사, 1973.

〈표 1〉 우리나라의 년도별 출판 경제학원론 수(1951~1999)



1951년~60년: 8, 1961년~70년: 23, 1971년~80년: 41, 1981년~90년: 105, 1991년~99년: 84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이후를 우리나라의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기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학원론에 나타난 용어 사용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예가 ‘금융정책’의 정의이다. ‘금융정책(金融政策, financial policy)’의 정의,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설명은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기 이전에 발간된 한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금융정책에 관한 정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금융정책의 목표: 금융정책이라 함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또는 신용에 관한 각종 정책을 가리킨다. 금융정책의 목표는 ① 환시세의 안정 ② 안정화폐의 유지 ③ 화폐적 간섭의 배제 ④ 완전고용의 실현과 유지 ⑤ 최대한의 경제성장 등이다.

금융정책의 수단: 금융정책의 수단은 둘로 크게 나뉘어 진다. ① ‘양적 통제수단(量的 統制手段)’은 제공되는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선별하지 않고 자금의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 재할인정책, ㉡ 공개시장정책, ㉢ 지

16) 김두희, 『공무원 경제원론』, 법전출판사, 1977, pp. 212~217.

불준비제도). ② '질적 통제수단(質的 統制手段)'은 양적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자금 흐름의 방향과 용도 및 자금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금융정책 수단이다(구체적으로, ㉠ 경제안정을 위한 질적 통제수단: 이것은 양적 금융통제로 인해 어떤 특정한 부문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것을 중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선택적 통제로서, 이에겐 증권금융규제, 소비자신용규제, 금융의 창구규제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금융의 창구규제는 자금수요를 용도별로 우선적으로 용자시켜 시중은행의 총용자량 및 용자구조 자체를 규정하려는 통제이다. ㉡ 특정부문육성을 위한 질적 통제수단: 이 방법은 특정산업부문을 전략부문으로 정하고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문에 대한 특정한 자금을 방출한다거나 용자조건상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수출금융 또는 농업개발을 위해 농협을 통한 자금을 방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때의 금융정책의 정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 변화를 통하여 경기변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통화정책(通貨政策)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제의 생산역량의 강화에도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가 된다. 금융정책의 이러한 정의는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경기조절정책인 monetary policy와는 다르다.

이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관한 개념 설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에서의 금융정책의 방향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금융정책의 개념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학원론에서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현대경제학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학원론에서는 금융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와 대비하여 살펴보자.

## 2.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용어가 미친 영향

1970년대 후반 이후가 한국 경제학의 발달사(發達史)에서는 영·미 경제학의 본격적인 도입기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경제학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 학계와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에서 교

육을 받은 경제학 전공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sup>17)</sup> 따라서 자연히 경제학의 내용도 미국 경제학 교과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경제학원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기 이후의 경제학원론에서 monetary policy가 ‘금융정책’으로 번역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신화폐수량설(新貨幣數量說)을 설명하는 다음의 예문을 들 수 있다:<sup>18)</sup>

이 설(說)에 의하면 거시경제변수 사이의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함수 관계는 국민소득과 통화량(通貨量)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이자율이나 기타의 융자조건(融資條件)을 그 지표로 하는 정책은 사실 ‘신용정책(信用政策, credit policy)’이지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마땅히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금융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monetary policy가 금융정책으로 잘못 옮기고 있다. monetary policy는 통화정책으로 옮겨져야 옳다.

1980년대 이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에서는 ‘금융정책(financial policy)’을 ‘통화정책(monetary)’과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흔히 발견된다.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발간된 총 42종의 경제학원론 교과서 중에서 분석 가능한 34종 교과서의 44퍼센트에 달하는 15종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제공되는 금융정책의 수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금융정책의 수단: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조절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정책을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금융정책수단(monetary

17)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1,239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미국 학위자의 비율이 70퍼센트에 가까운 853명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독일과 일본 학위자의 비율은 각각 8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8) 조순, 『경제학원론』, 법문사, 1978, p. 594.

policy instruments) 으로는 공개시장조작, 법정 지불준비율정책, 그리고 재할인률정책 등 3가지가 있다. ...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경제의 상황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확대금융정책(expansionary monetary policy) 또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긴축금융정책(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일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정책의 주내용이 경기조절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시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정책 중에서 통화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의 자유방임적인 특성상 선별적인 질적 통제 수단의 실시가 강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경기조절정책으로써 통화정책에 비중을 두는 영·미의 경제 현실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한국의 실정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확대금융정책'은 '확대통화정책'으로, 그리고 '긴축금융정책'은 '긴축통화정책'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통화정책을 금융정책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이해하는 경우, 한국 경제의 현실 문제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심한 무력감(無力感)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의 경우, 실제로 선별적인 질적 통제 수단이 금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경우 금융정책은 통화정책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정정책(財政政策)'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타난 재정정책의 개념에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단순한 경기조절기능 이외에도 경제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포함되어 있다.<sup>19)</sup>

재정정책도 장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한 재정조치(財政措置)로서

19) 성기춘, 『경제원론』, 박영사, 1965, p. 221.



는 주로 기술진보와 저축률의 조정 및 신투자의 확보를 충족하는데 있다. 즉, 첫째로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여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고, 둘째로 완전고용성장률과 같은 생산능력의 성장률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저축률을 확보하며, 셋째로 그 저축률 하에서 생산능력을 정상적인 상태로 완전히 이용해 나가는데 충분한 신투자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장기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정적 조치로는 물론 그 정책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세법상의 우대, 각종 보조금제도 및 세율의 조작(造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예문에서 재정정책은 경기조절정책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에서는 재정정책을 단순히 경기조절정책(또는 총수요관리정책)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재정정책의 정의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조세수입이나 정부지출의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재정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 때로는 총수요관리정책(總需要管理政策, demand management policy)이라고도 부른다.

이 예문에서도 재정정책이 영·미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른 시각인 경기조절정책으로 좁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의 이와 같은 개념 설명은 다음 예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만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정부는 정부지출을 크게 할 것이고,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하면 조세를 더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이 경우에도 재정정책을 주로 총수요관리정책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영·미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재정정책을 좁은 의미의 경기조절정책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옮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이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학문의 내용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편중됨으로써 경제학 용어의 개념 설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예가 ‘무역정책(貿易政策)’과 ‘통상정책(通商政策)’의 불분명한 구분이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역’ 보다는 ‘통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무역’과 ‘통상(또는 국제통상)’을 구분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굳이 영어 표현을 생각해야 할 때, ‘무역정책’은 trade policy라고 한다면, ‘통상정책’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정책’이라는 개념은 미국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어 표현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통상’과 ‘무역’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예로, 미국의 대통령 산하(傘下)의 정책집행기구(an executive office)인 USTR(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무역대표부(美國貿易代表部)’로 지칭되기도 하고,<sup>20)</sup> 똑같은 대상이면서도 또 다른 경우에는 ‘미국통상대표부(美國通商代表部)’로 번역되기도 한다.<sup>21)</sup> 만약 어느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 표현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제통상’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국제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지만,<sup>22)</sup> 이러한 표현도 ‘국제통상’이 ‘국제무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무역’을 재화(財貨)의 국가간 거래로 규정하고, ‘통상’은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포함하는 문제로 정의하는 것도<sup>23)</sup> 역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통상정책’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sup>24)</sup>

20) 김재준, 『신국제무역이론』, 다산출판사, 1998, p. 26.

21) 박종수, 『국제통상론』, 동성사, 1990, p. 242.

22) 김선광, 김재봉, 이규훈, 이호건, 『국제통상학개론』, 동성출판사, 1996, p. 22.

23) 같은 책, p. 23.

24) 박종수, 앞의 책, pp. 161~162.

통상정책이란 일국(一國)이 특정 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양국간 혹은 다자간 무역관계의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즉, 자국의 산업정책과 비교우위체제를 토대로, 교역상대국의 특수성 및 여건변화와 세계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한 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경제·무역규모가 왜소한 상태에서는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위주의 통상정책결정이 중심이 되나 경제·무역규모가 확대될수록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내생변수화(內生變數化), 사회·경제적 배경의 투영, 정책결정기구의 체계성, 민주성,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의 요인들이 중시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통상정책은 단순히 무역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위한 상업정책을 비롯하여 국가경제의 제도와 규범의 운용 전반(全般)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즉, 통상정책은 일반적인 무역정책 이외에도 법률과 제도의 확립, 그리고 특정 산업에 관한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무역정책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표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은 역시 영·미 경제학 교과서의 시각에 우리 스스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따른 용어에 편중되어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용어의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영·미식 용어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경제학이 보다 현실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 IV. 경제학 원론 용어의 개선

앞에서 논의된 네 가지 유형이 반드시 정형화(定型化)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유형에 맞추어 개선책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본 논문에서 각 유형별로 경제학원론의 용어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이 네 가

지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회(研究會) 등을 결성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우리말 표현에 더욱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몇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본식 표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다. 한자어(漢字語)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 표현에 맞지 않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교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표현은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공학적인 표현은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技術的) 설명은 체험적(體驗的)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더욱 우리말다운 표현과 거부감 없는 표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원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칙(法則)’이라는 표현들은 가급적 자연스러운 ‘현상(現象)’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경제학이 암기력 위주의 학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초보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학은 국제화되고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맞고 있다. 따라서 초보 학습자들을 외면하는 경제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친절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들은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학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용어들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올바른 표현의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경제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의 역할이 제고(提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학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주

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학용어들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학회 내부에 경제학용어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용어는 보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학 용어의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편중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학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이 지나치게 영·미 교과서에 편중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내용의 경제학을 조화 있게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제학이 현실에 더욱 적합한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제학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즉, 경제학용어가 ‘한계(限界)’와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균형(均衡)’처럼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하는 경우, ‘상품수지(商品收支)’와 같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을 ‘금융정책(金融政策)’으로 정의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영·미 경제학 교과서에서의 편중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경제학용어의 사용은 경제학 학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학용어들을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학원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가운데 부적절한 일본식 용어들은 한·중·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한다면 더 나은 용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본 용어의 배척보다는 우리에게 더욱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것이다.

경제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주도해 온 가장 핵심적인 학문이었으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주역(主役)이었다. 경제학 분

야에서 제공한 경제발전의 이론적 틀이 없었다면 지난 시절에 경험한 우리의 ‘경제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학이 이러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부족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경제학이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영예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찰(省察)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용어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 참고 문헌

1. 교육서관, 『국어대사전』, 교육서관, 1994.
2. 高文社, 『經濟原論』, 岸本誠二郎 監修, 東京: 高文社, 昭和 33년.
3. 김두희, 『공무원 경제원론』, 법전출판사, 1977.
4.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 경제학원론』, 제4전정판, 박영사, 1999.
5. 김선광, 김재봉, 이규훈, 이호건, 『국제통상학개론』, 동성출판사, 1996.
6. 김재준, 『신국제무역이론』, 다산출판사, 1998.
7. 박종수, 『국제통상론』, 동성사, 1990.
8. 백영훈, 『현대 경제학』, 문운사, 1973.
9. 손정식, “오역(誤譯)된 경제용어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제학회지』, Vol. 27, 1979, pp. 88~99.
10. 성기춘, 『경제원론』, 박영사, 1965.
11.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1995.
12. ———, 『신경제학개론』, 제3판, 율곡출판사, 1996.
13. 조 순, 『경제학원론』, 법문사, 1978.
14. 최호진, 『경제원론』, 보문각, 1958.
15. 홍 우, 『경제원론』, 探求堂, 1954.
16. Random House의 동의어 사전(Thesaurus), 1984.
17. Thurow, Lester C., Heibroner, Robert L., and Galbraith, James K., *The Economic Problem*, 中村達也 譯, 『現代經濟學』(上), 東京: テイビーエス・ブリタニカ, 1990.